

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 지방교부세율·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1.19. 매일경제는 「선거앞 국세 100조 떼어 ‘지방 이전」 기사에서,
 - 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 …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”, “행정통합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, 충남·대전, 광주·전남 두 지역에만 4년간 총 40조원이 투입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 지방교부세율,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선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,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·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,
 -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「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」를 구성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지출혁신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원 (jaewonlee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민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